

전주시, 불합리한 규제 완화 본격화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위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주시가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역사도심 내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도 대폭 상향키로 했다.

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도시의 변화와 발전상과 무관하게 운영해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80%에서 200%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준주거

지역은 350%에서 500%로 각각 용적률이 상향된다.

또한 상업지역 용적률도 다른 대도시와 비슷한 평균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심상업지역은 기존 700%에서 11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로, 근린상업지역은 400%에서 700%로, 유통상업지역은 300%에서 700%로 제한이 풀린다.

특히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기존 80%에서 90%까지 완화되고,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상업시설 설치 비율에 따라 상향된 용적률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여건 개선을 위한 용적률 완화 기준이 될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위해 3월 중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전주시의회 심의를 득할 계획이다.

동시에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5월까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과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함께 공포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낙후된 도심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부족한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돼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물 높이 심의를 폐지하는 등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으며, 지난 2월에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해제하는 등 꾸준히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왔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의 위대한 도약을 꿈꾸는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다양한 규제개혁과 광역도시 기반 구축을 통해 미래광역도시로 나아갈 것"이라며 "강한경제 전주 구현과 광역도시 성장 기틀 마련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하나씩 청취해 개선하고,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와 공원주변 고도지구 등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도록 과감한 도시계획 역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양은경 기자



사진 왼쪽부터 어린이 교통 안전 확보 합동캠페인, 사랑의 헌혈 동참.

새학기 안전한 등·하굣길 만든다

전주덕진경찰서, 민·관 합동캠페인 전개·헌혈 동참

전주덕진경찰서는 15일 덕진구 조촌초등학교 정문과 통학로에서 새학기 어린이 교통 안전 확보 위한 합동캠페인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은 전주시교육장,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경찰, 조촌초교 학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학기 어린이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새학기를 맞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용품과 전단지를 나눠주고 횡단보도 보행 안전 관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30km 속도 준수와 방어운행 3원칙(서다, 보다, 걸다)에 맞춰 횡단보도 걸기 안내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기에 통행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및 올바른 우회전 통행방법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더불어 이날 전북지역 혈액 부족에 따른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청사 본관 주차장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이 펼쳐졌다.

사랑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준비했으며, 헌혈을 통한 혈액난 해소와 생명나눔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경찰관, 행정관, 주무관 등 자발적인 희망자에 한해 헌혈에 동참했다.

김태형 덕진서장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하며 "생명을 살리는 헌혈운동에 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지역산업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맞손'

지역산업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맞손'

전주시-중진공, 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과 전주시는 15일 오후 전주시청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전략을 뒷받침하고,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우범기 전주시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미래자동차, K-콘텐츠 등 지역특화산업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핵심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전주형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전주시는 15일 오후 전주시청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재직자 직무연수, △제조현장 스마트 교육을 위한 스마트공장매우터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인프라가 열악한 전북지

역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산업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전주시 대성동에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건립 추진을 약속했다. /조아록 기자

전북환경청, 만경강 하천기본 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가져



유지관리 담당 5개 시·군(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환경운동연합,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15일 새만금유역관리단장 주재로 만경강권역(지방하천 포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라북도과 만경강

문가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 환경단체와의 갈등은 그간 환경청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있다. 이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미흡한 탓이다.

보고회를 통해 지자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만경강과 연계한 사업은 하천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국가하천 관리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번 만경강 하천기본계획은 유역특성을 반영한 치수적 대응과 자연성 회복에 방향을 잡았다. 농업용수를 위한 댐에 치수능력을 부여해 홍수에 대비하고 습지 조성, 구하도(舊河道) 복원, 고정보 철거 등을 통해 수생태 기능을 개선할 것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 기상지청, 대형산불 대응 합동 모의훈련

전주 기상지청이 봄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예방에 앞장섰다.

15일 이용섭 전주 기상지청장은 "전라북도 대형산불 대응 합동 모의훈련을 마련해 완주군 모악산 인근에서 진행했다."

이는 산불로부터 지역민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산불 통합 대응과 지원 역량 강화를 구축한 것이다.

특히 전주 기상지청은 '산불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산불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경우 재난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산불현장에서 기상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산불 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훈련은 광주지방기상청, 전주 기상지청, 전라북도, 완주군이 참여해 완주군 모악산 인근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것을 가정해 실시했다.

훈련 내용은 '산불 관계기관에 산불 진화용 기상정보 제공, 산불 현장 재

난 현장지원반 운영, 현장 파견, 기상관측차량 특별관측' 등이다.

산불진화용 기상정보는 산불 발생 지역의 기상 관측자료와 초단기·단기예보, 진화행기 지원을 위한 고도별 풍향·풍속·연직상승류 예상자료, 난류 예측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전주 기상지청은 재난 현장지원반을 운영해 기상전문가를 파견함으로써 산불 현장 기상정보 분석·제공과 산불진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지방기상청 협조를 통해 기상관측차량 운영 등 '기온, 풍속·풍향' 산불 현장 기상자료를 실시간 관측함으로써 위험기상을 감시한다.

이용섭 전주 기상지청장은 "최근 봄철에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북 지역도 대형산불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훈련으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산불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